

# 전남도-동·서부권 12일 회동 '의대 공모' 물꼬 트나

### 목포·순천 지자체·대학 5자 회동도 "통합 논의 위해 공문 발송" 200명 정원 정부 건의 등 설명 동부권 반발 속 순천 참여 관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학 선정 '공모'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지사와 목포, 순천 지자체장 및 대학 총장의 '5인 회동'이 예고되며 공모 방식 추진에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목포시, 순천시 등 4곳에 공문을 보내 전남 국립의대 설립 관련 합리적 방안 논의를 위한 5자 공동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목포

시의회 의장 등 서부권과 이병은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등 동부권 대학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면담을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동간담회의 경우 동·서부권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최초의 회동이라는 점에서 성사 여부는 물론, 도출될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남도가 공문 발송을 통해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의대 공모가 '공적 업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동간담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목포와 순천의 중간지점인 보성군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 제안이 '김영록 지사가 무한히 인내하며 양측의 공모 참여를 기다리겠다는 원칙을 밝힌 상황에서 두 대학과 두 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이라는 입장이다.

김영록 지사는 간담회에서 공모를 통한 대학 추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로드맵과 2026학년도 정원 200명 배정 정부 건의 배경 등을 설명하고 양 시장과 두 대학 총장의 입장과 건의 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다만 공모 방식에 응하기로 한 목포대와 달리 순천대를 비롯한 동부권 지자체와 정치권의 경우 여전히 전남도의 공모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공동간담회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동부권의 경우 의대 신설의 법적 권한이 전남도에 존재하지 않고, 교육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남도의 공모 방식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7일 오전에는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 순천대학교 총장,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 지역구 총선 당선인 등

이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 관련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5인 회동'의 성사 여부도 가능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내 '정부에서 5월 중 각 대학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반영해 확정하는 대입전형시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이 배정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뜻에 따른 것으로, 전남도는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 늦어도 9-10월께에는 추천 대학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동부권에서 전남도의 추천 대학

선정에 대한 권한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공문 발송을 통한 정부의 응답 및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모에 대한 답변을 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원 배정 관련) 피드백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며 "실무자들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달 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 용역 추진을 위탁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대학 설립 방식 결정과 대학 평가 기준을 마련, 최종 평가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10월께에는 추천 대학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곽지혜 기자**

## 광주시-경기도 "균형발전 광역모델" 상생협력

### AI 실증 지원·미래차 전환 발굴 후속 협력과제 점검·확대 논의

광주시와 경기도가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협력 결속을 다졌다.

광주시와 경기도는 지난 3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경기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광주시-경기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내용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만남이다. 협력 과제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력 과제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선도 협력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청년·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추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양 시도는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활성화

를 위해 실증기업의 제품평가 및 기술 지원, 인공지능 박람회 개최에 교차 참여하고 있다.

또 미래모빌리티 전환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간담회, 청소년 교류행사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양 측은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시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전환에 주력하고,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전환경차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양 시도의 중점사업을 교류·협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해 5월 '기회수도 경기'와 '기회도시 광주'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며 "경기와 광주는 더 큰 도약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아시아 문화여행 '아시아컬처마켓'

'2024 아시아컬처마켓'이 지난 4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버나돌리기와 공연 '놀이왕 사자' 등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마련했으며 아시아 각국의 먹거리와 문화상품, 예술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양배 기자**

## 광주시, 음식점 287곳 위생등급 사전평가

광주시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287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음식점 위생등급 맞춤형 지도(사전평가)를 7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공개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식품점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현재 광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현황(3월29일 기준)은 1039개소(매우우수 896, 우수

112, 좋음 31)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는 기본분야(5항목), 일반분야(33항목), 공통분야(6항목) 등 총 3개 분야 44개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등급이 부여된다.

또,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탁받아 실시한다. **노병하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 Yes, &strue balanced ]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